

이슈파워



실종 33년만에 정신병원서 발견...法 “국가 2000만원 배상”

“가족 찾을 기회 박탈당하고 큰 고통”...책임 20%로 제한

집을 나가 실종된 지 33년 만에 정신병원에서 발견된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정신장애 2급 홍정인(60·여)씨가 국가와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홍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위법행위로 가족을 찾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족들과의 연락이 단절된 채 요양원·병원에 있던 홍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은 분명하다”며 “홍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

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송 부장판사는 경찰은 전산입력·수배 의무를, 해운대구는 신원확인 의무를, 국가는 지문조회 관련 의무를 각각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 등의 책임은 20%로 제한했다. 홍씨 가족이 가족·실종신고를 하지 않아 전산입력·수배 절차를 거쳤더라도 신원확인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홍씨가 자신의 이름을 김모씨로 말하고 주민등록번호 등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점 등이 고

려됐다.

홍씨는 1980년 1월 직장을 구하겠다고 집을 나가 같은해 3월 광주에서 친언니에게 전화한 이후 소식이 끊겼다.

홍씨는 2년 뒤인 1982년 6월 부산진역에서 경찰에 발견돼 구청 공무원에게 인계됐다. 공무원은 홍씨를 행려병자로 보고 정신병원에 수용했다.

30년도 더 지난 2013년 12월 부산해운대경찰서가 지문조회로 홍씨 신원을 확인했고, 홍씨는 언니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간 가족들은 홍씨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무렵 사망했다고 생각해 홍씨에 대해 실종신고나 유전자등록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최영호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

“아파트 인·허가, 광주시보다 남구청 조건 강화...특혜 거리 멀어”

“1년6개월 전 일...총선 겨냥 악영향 미치려는 불순세력 정치적 음해”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구청장 재직 시절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전 구청장은 2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남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나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최 전 구청장은 "이번 사건은 금품이 오갔거나 특혜를 줬다는 어떠한 실체나 증거가 없다"며 "관련자들조차 금품을 줬는지에 대한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된 아파트는 당초 광주시보다 남구청의 허가조건이

훨씬 강화돼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며 "시민들의 산책로인 '푸른길'과 교통난이 심한 백운광장 옆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에 교통로 추가 확보와 시민들을 위한 공원조성 같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민편의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최 전 구청장에 따르면 구청장 재직시절이던 2015년쯤 K 모 건설이 광주 남구 주월동 백운광장 옆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인허가를 신청했다.

광주시는 아파트 인건 폐도로를 6~10m, 단지 인접 도로는 12m로 개설하도록 조건부 승인했다.

하지만 최종 결정권이 있는 남구청은 교통체증이 많은 지역임을 감안해 도로 폭을 10~13.5m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백운광장 쪽은 시가 허가한 3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공원 280여평을 조성, 푸른길과 연결해 기부채납하라는 조건까지 달았다.

최 전 구청장은 "당시 남구청의 허가 조건을 접한 업체는 '광주시 승인 내용보다 도로 폭을 늘리고, 공원을 지어 기부채납하면 사업이유가 130억원가량 줄어든다'고 주장했다"며 "업체가 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업에 대해 어떻게 특혜 의혹을 씌울 수 있는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아파트 단지 면적을 늘려주는 특혜를 줬다가 수사를 받는 것은 했지만, 아파트 건설업체에게 손해를 보게 했다고 수사를 받는 것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남구가 내건 조건은 '특혜'가 아니고 시민들을 위해 공공성을 확대함으로써 업체 이윤이 줄어드는 '적극행정'이라는 게 최 전 구청장의 반박이다.

최 전 구청장은 지난해 7월 시작된 경찰 수사가 1년6개월이 지난 시점에 불거진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전 구청장은 "이 사건은 저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작년 6·13선거를 전후로 광주 지역에서 수십여 명의 이름이 거론된 횡령의혹 사건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이 불거진 지 1년6개월이 지났는데도 총선 경선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야 송치가 됐다"고 지적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수사 기간이나 수사 대상 등을 감안했을 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눈앞으로 다가온 총선 경선에 어떻게든 악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개입했다는 강한 의구심을 떨쳐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의혹은 당초 '돈을 줬다'고 주장했던 사람조차 최근 경찰 조사에서는 '금품을 준 기억이 없다'며 시인한 것으로 안다"며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법적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증거나 실체가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 어떤 음모로부터도 무죄를 받도록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아파트 단지 인허가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최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 4명과 브로커 2명 등 총 6명도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최 전 구청장 등은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에 관여하고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가짜 권양숙”에 속은 윤장현 前 광주시장 오늘 항소심 선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송금했다가 공천 헌금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3일 열린다.

2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3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무신) 심리로 진행된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모씨(49·여)에게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



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로 속인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 4억5000만원 추징을 판결했다.

“겨울왕국2, 스크린 점유 88% 독점 위법”

시민단체, 독점금지법 위반 디즈니 檢고발

시민단체가 국내 상영관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겨울왕국2'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에 월트디즈니 컴퍼니코리아(이하 디즈니)를 독점규제 및 경쟁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소시자 선택권 제한) 등으로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디즈니가 배급한 '겨울왕국2'는 스크린 점유율 88%를 기록하고 상영회수 1만6220회(11월23일 기준)로 한국 영화관 사상 최고 상영수(중전 이벤트스 엔드게임 1만3397회)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개 사업자가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서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디즈니)는 스크린 독점을 시도, 단기간에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독점규제 및 경쟁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7일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 [고객센터 1577-1000]